

# 발주처 눈치만 보는 감리...부실감리 처벌 강화해야

## 건설현장 사고 악순환 끊으려면

### <하>유명무실 감리제도 바꿔야

도대체 아파트 17개층이 무너질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지는 동안 감리는 뭘 했을까.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영상·사진을 지켜본 대다수 전문가들은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장에 상주했다면 콘크리트 양생 과정을 모를 리 없고 설계도, 안전계획서, 공사계획서대로 시공되는지 챙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도 당시 현장에 상주 감리자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상태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시공이나 감리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책임소재를 따지는 중이다. 이미 현장 감리자 3명을 입건한 상태다.

건설업계에서 감리의 권한·역할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감리만 제대로 했다면’=21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를 담당한 업체는 경기도 용인소재 A 업체로, 아이파크 1·2단지 감리를 위해 상주감리원(건축감리 4명·기계감리 2명·총괄감리 1명) 7명, 비상주감리원(건축 1명·토목감리 1명) 2명 등 9명의 감리를 운영했다. 이들은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타설되는 레미콘 양이 적절하지, 거푸집에 타설된 레미콘이 밀도 높게 공간을 채우는 지, 철근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동바리를 공사계획서대로 세웠는지 등을 현장에서 지켜보거나 점검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파트 17개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만큼 현재까지로는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될만하다. 안전시공에서 감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형식적인 감리 의혹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확보한 감리보고서에는 17개층이 무너진 201동 외에 203동 39층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 일부가 주저앉아 공사를 중단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경찰이 당시 바닥 슬래브가 내려앉아 공사를 중단했다는 작업자 증언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허술하게 감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해 12월 말까지 끝조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공정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올해 초 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감리보고서에는 공정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계획(60.3%) 대비 실적(62.6%)로 계획 대비 103.8%가 달성됐다고 기록,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이 애초 승인받지 않은 공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도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감리업체인 A사는 2019~2021년 사이 2차례 벌점을 부과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벌점 부과 사유는 ▲시공사의 건설안전관리 확인 소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등 부실 감리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A사 뿐 아니다. 감리회사들이 최근 2년 간 부실

감리 인건비도 발주처에서 지금 유일한 현장 안전장치 역할 못해 침하 사실 누락 등 형식적 감리 2년간 부실감리 벌점 600건이나 ‘감리다운 감리’ 위한 환경 조성

감리 등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횟수만 약 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벌점을 부과 받은 감리회사도 200여곳에 이른다. 많은 곳은 2년 간 20차례나 벌점을 받았다. 정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실 감리를 벌점 부과 원인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다.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때 감리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선정 과정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의 역할·처벌 강화하는 환경 서둘러야 감리의 감독 기능이 사라졌고 발주처의 눈치만 보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민간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감리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감독하는 감리자 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높다. 감리가 ‘을’의 위치여서 ‘갑’인 기업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립적인 감리를 실시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얘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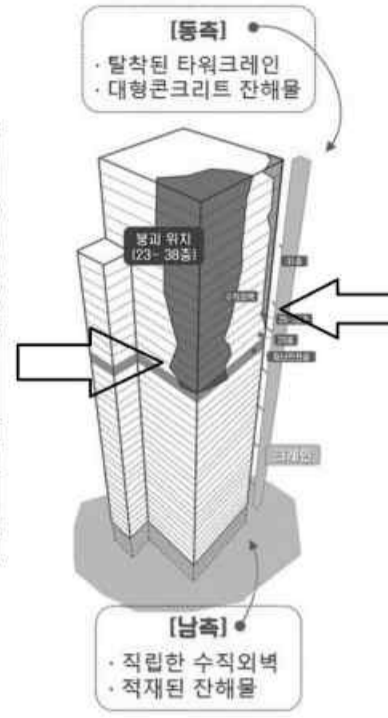
최병기 동신대 교수는 “국내 건설 현장에 감리자가 너무 열심히 일하면 잘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발주처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빨리 공사를 끝나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감리가 공사중지를 내리거나 공사에 태클을 걸게 되면 좋아할 시공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감리 인건비조차 발주처에서 지급하는데 어느 감리가 발주처나 시공사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을 하겠느냐. 감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 감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13년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 사고 때도 법원은 감리 2명에게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지난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 이후 정부는 해체공사에는 감리가 상주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착공신고를 하도록 해 실제 공사 착수, 지장 감리와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노동계는 그러나 입법과 대책도 중요하지만 만연한 부실 감리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성주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감리가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공사 중지를 강력하게 외칠 수 있도록 현장이 변해야 감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방당국이 발표한 구조작전 위험 분석도(가운데). 남쪽 모서리 부분(왼쪽)과 동쪽 모서리 부분에 걸려있는 건축 잔해물이 자칫 강풍, 중장비 진동 등으로 떨어지거나 건물에 영향을 미쳐 추가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소방당국 분석이다. <소방청·광주소방안전본부 제공>

## 23층~옥상 외벽만 덩그러니...진동 발생시 2차 붕괴 우려

### 화정 아이파크 수색 더딘 이유는

#### 소방당국 구조작전 위험 분석

“바닷속도 아닌데, 왜 (실종자들) 못 찾는지야?”, “수색개도 데리고 다니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거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색을 맡는 소방당국에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급기야 소방당국이 사진을 결정한 구조작전의 위험도를 제공했다. 하루속히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싶은 마음은 골똥같지만 이같은 건물 상황때문에 쉽지 않으니 양해해달라는 취지다.

소방당국은 붕괴된 201동 아파트를 동쪽과 남쪽

두 방향에서 무척 위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쪽 방향의 경우 23층부터 옥상층까지 바닥이 모두 붕괴돼 외벽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상태라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그나마 25~26층 사이에는 외벽에 붕괴된 건축 자재들이 무더기로 걸려 있고 작업용 승강기도 달려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중장비를 투입했다가 진동이 가해질 경우 무게중심이 틀어지면 2차 붕괴가 우려될 정도다.

동쪽 방향에서는 기우뚱하게 세워진 140m 타워크레인이 구조와 수색에 가장 위험한 원인으로 꼽힌다. 타워크레인을 아파트에 고정시켜놓았던 장치(브레이크)가 2군데나 떨어져 강풍이라도 불면 무게중심을 지탱하기 어렵게 될 지 몰라 소방당국은 초긴장 상태다. 타워크레인의 무게추 역할을 하는 27t 가량의 평형추도 이 쪽 방향에 있어 위험

도를 높인다.

건물 동쪽에도 붕괴된 건축 자재들이 철근더미와 전선 등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언제 밑으로 떨어질 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이같은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21일 오전 8시부터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해체 작업만 오후 6시까지 9시간 넘게 진행된다. 작업 시간 동안 타워크레인 반경 79m 이내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해체 이후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해체 중에는 모든 수색작업도 중지된다.

현대산업개발측은 “해체 도중 타워크레인이 전도되기 전, 전도 중상이 미리 발생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피 경보음을 울리고 추가 통제령을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10명 중 8명 “공기 단축 따른 속도전 원인”

### 콘크리트 양생 부족·불법 다단계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등 지적

#### 건설노동자들에 붕괴 원인 물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사현장의 무리한 속도전을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10명 중 7명은 시공사 문제점으로 콘크리트 양생(養生·군현) 부족을 꼽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건설노조 조합원 75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7~18일 목수 등 토목 건축, 덤프·레미콘 등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전기

등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한 노동자들의 80.7%는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공기(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을 꼽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지적한 경우도 55.6%에 달했다. 공사 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비용 부족(39.2%), 노동자 참여 없는 안전대책 수립(24.1%)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공과 관련, 가장 큰 원인으로 콘크리트 타설 보양 부실로 인한 강도저하를 꼽는 노동자(75.1%)가 가장 많았다. ‘무량판 구조(보 없이 바닥 기둥만 있는 형태)의 무리한 시공’을 꼽는 노

동자들은 44.1%였고 ‘부실 철근 자재 사용’ 26.6%, ‘타워크레인 고정장치(브레이크) 등 타격’ 등의 문제점을 꼽는 노동자(11.8%)도 있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66.9%)과 빨리빨리 속도전(63.3%)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안전예산 축소 등 최저가낙찰제 문제(54%), 건설사의 안전 관리 감독 소홀(37.0%), 부실하고 이론적인 안전교육(32.5%) 등도 뒤를 이었다.

건설노조는 이날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도 물량도급 형태의 불법하도급과 39층을 10개월에 완료하는 속도전,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양생, 레미콘 품질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으로 드러났고 있다”며 “원형 뿐 아니라 발주자, 감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